

지자체 방관에...마한 고분 훼손

땅 주인, 무분별한 건물 터파기...굴식돌방무덤 내려 앉아 북구 "문화재 인지 못한 땅 소유주 잘못" 2차 고소하기로 광주시 문화유산위 "사료 가치 높은 유적 서둘러 복원해야"

광주지역 마한 시대를 대표하는 북구 각화동2호 고분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각화동 2호분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던 북구는 토지소유주가 건축 허가신청을 냈음에도 유적보존에 나서지 않아 훼손을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백제 병합 이전 광주지역 마한 역사를 품고 있는 고분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각화동 2호분(매장유산)훼손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고분은 광주 북구 각화동 각화정수장 입구 야산에 있었다.

2호분은 지난 2021년 토지 소유주가 북구의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을 세우던 과정에서 크게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터파기 공사로 인해 굴식돌방 무덤이 파손된 채 방치됐다.

광주시 자문위원은 "이 고분은 6세기 전후 시기의 문화유산으로 광주지역 고대사연구에 중요한 자료로서 파괴나 훼손이 자행되서는 안된다"면서 "훼손부 복원조치를 선행하고 기존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해 향후 체계적인 보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당시 토지 소유주는 북구에 건축을 위한 허가를 요청했다.

북구는 당시 건축허가필증이 나오지 않으면 건물 건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서 땅 주인의 편을 봐주기 위해 착공 전 역사·문화·향토적인 부분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건축허가필증을 내줬다.

북구가 안일한 행정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북구는 조건부 허가를 낼 당시 문화재라는 사실을 땅 주인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지자체가 이를 고지할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부지와 관련된 사항은 토지 소유주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구는 "해당 지역의 매장 문화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굴조사가 됐던 곳이고 조사가 된 곳에서 허가받지 않고 매장 문화재 관련 지역에 현장 발굴을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땅 주인의 과실이 크다"고 설명했다.

훼손된 고분을 복구하는 것도 북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구는 지난 2022년 5월 광주북부경찰에 땅 주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북부경찰은 땅 주인에 무혐의 처분을 내줬다. 북구는 빠른 시일 내 2차 고소를 할 예정이다.



광주시 북구 각화동 2호분이 건물 터파기 작업으로 파헤쳐진 채 방치돼 있다. <광주시 북구 제공>

각화동 2호분은 1987년 향토문화재발굴협의회에서 발견해 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했다. 이 고분은 북구 농산물공판장 부지에 있다 자취를 감춘 각화동 1호분과 형태가 유사하며, 굴식돌방무덤 등 영산강식 석실 고분으로 알려져 있다.

호남문화재연구원이 지난 2009년 조사한 2호분은 주변보다 높은 구릉에 위치해 있었으며 평면은 원형에 가깝고 규모는 12m, 높이 2.2m였다. 이곳에서는 개편, 토기저부편, 철축이 발굴됐다.

각화동 2호분은 앞서 두차례 도굴로 석실이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산강식 석실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있고 석실의 구조와 출토 유물 등을 통해 광주지역 토착세력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어 가치가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영산강 유역권에 백제에 완전히 병합되기 전까지 광주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세력집단이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보기드문 고분 자료'라는 점에서도.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초기 철기시대~조선시대 주거지 발굴

북구 연제동 공동주택 신축사업부지서 유물 107점도

광주시 북구 연제동 공동주택 신축 부지에서 초기 철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주거지와 유물이 대거 발굴됐다.

29일 호남문화재연구원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 연제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부지(연제동 583-6)에서 107점에 달하는 초기철기~조선시대 유물이 발견됐다.

유물은 초기 철기 39점, 삼국 17점, 원삼국 31점, 조선 19점, 미상 1점 등이다. 구체적으로 석축과 무문토기 조각, 점토대토기 조각, 발형토기, 적갈색연질토기 등이다.

이번 발굴에서는 수혈(甕穴·구멍이시설) 28기, 지상건물지 12기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2기는 외부구만 남아있고 내부시설은 거의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부는 부뚜막과 벽구, 외부구 등이 갖춰져 있어 주거지로 판정됐다.

2008년 광주 신촌유적(북구 연제동 425번지)에서 구석기~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구에서 수혈만이 확인됐지만 이번 발굴에서는 주거지 4기가 발굴됐기 때문이다.

호남문화재연구원은 "생활유구인 '주거지'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굴조사 단계에서부터 확인된 구상유구(溝狀遺構·도랑 모양 시설)는 저습지와 마을을 구분하기 위한 보호시설 성격을 가진 것으로 해석됐다.

호남문화재연구원 관계자는 "2008년 조사 당시 구석기 시대 유물이 발굴된 광주 신촌유적 유구와 이번 연제동 유구가 밀접하게 연관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며 "영산강 상류지역의 청동기~삼국시대의 문화 변동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5월부터 한달여 시굴조사를 마치고 1·2차에 나눠 정밀발굴조사(2023년 8월 7일~11월 22일)를 진행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총장로 상권 르네상스 효과?

2분기 중대형 상가 공실률 5.7% 감소

상권 침체를 겪고 있던 구도심 광주시 동구 총장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최근 5.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동구는 한국부동산원 공표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총장·금남로 일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분기 25.3%로 줄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분기 공실률 31%에 비해 한 분기만에 5.7%p 감소한 것으로, 지난 2022년 1분기 24% 이래로 가장 낮은 공실률이다.

동구는 총장로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상인들의 임대료 인하 등 노력이 일군 성과라고 자평했다.

동구는 지난 2022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해 상점가 축제 '라운 페스타'를 열고

여행자센터 '총장의 집(ZIP)', K-POP 팬 문화공간 'K-POP 공유카페' 등을 조성하고 핵점포와 마을백화점 등을 설치했다.

총장로 1·3가 상인회 또한 총장·금남로 내 건물주들을 지속 설득해 임대료를 인하하도록 이끌어 상가 입점에 기여했다.

오는 2025년에는 옛 와이즈파크 건물을 리모델링한 시너지타워 '몽키 터미널'이 문을 열 예정이라 상가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라고 동구는 밝혔다.

임택 동구청장은 "최근 점진적으로 불고 있는 총장로의 신규입점 증가 추세에 발맞춰 상권 내인 점포 활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총장로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일 사도광산 '강제노동' 삭제 진상조사해야"

시민모임, 유네스코 등재 과정 한·일 정부 조율 의혹 규명 촉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이 29일 성명서를 통해 "일본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 '강제노동'을 빼는 것에 한·일 정부가 조율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일본의 한 언론이 '사도광산 등재를 두고 한·일 양국 정부가 전시시설에서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당시의 생활상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다"면서 "정부가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이 대규모로 이뤄진 곳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위

해 일본 정부는 강제노동 관련 전시 설치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28일 공개된 전서에는 '강제'라는 언급 없이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등의 표현만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모임은 "전시에 강제노동 표현이 삭제된 것에 대해 한국 정부의 합의가 있었다면,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을 부인하는 일본 주장을 우리 정부가 승인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일본의 의도를 모를 리 없는 한국 정부 강제노동 표현 배제에 합의를 했다"며 "제2의 매국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전남 학교 전기료 폭증

지난해 555억...3년새 163억 ↑

광주와 전남의 학교에서 부담하는 전기요금도 2년새 40%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비례) 의원은 2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2021~2023 년도 전국 교육청 학교 전기요금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광주에서 공립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 학교 전기요금은 2021년 147억원, 2022년 175억원, 2023년 210억원으로 늘었다. 3년 새 63억원(43.1%) 급증한 것이다.

전남도의 학교 전기요금 또한 2021년 245억원, 2022년 288억원, 2023년 345억원 등 3년 만에 100억원(41.1%) 증가했다.

학교운영비 내 전기 요금 비중도 급증세다.

광주시는 2021년만 해도 전체 학교운영비 중 전기 요금 비중이 3.60%(4095억원 중 147억원)에 그쳤으나, 2023년에는 4.16%(5070억원 중 210억원)로 비중이 커졌다.

전남도는 2021년 3.60%(6814억원 중 245억원)에서 2023년 4.39%(7877억원 중 345억원)로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2023년 2년 동안 전기요금을 44.1% 인상했다.

백 의원은 "2023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 단가는 kWh 당 일반용 169.5원, 가로등 152.7원, 주택용 149.8원, 산업용 153.7원, 교육용 138.8원, 농사용 75.1원 등이다.

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여건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40724-중-173103호

상무지구 BYC사거리 <광고> 진료문의 | 062-381-3900

이제 광주스마일안과의원에서 시력을 개선하세요!

- 체계적인 진료시스템
- 풍부한 임상경험의 조용윤원장
-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과



광주 스마일 안과 Smile Eye Clinic

스마일수술/라식/라섹
드림렌즈 / 노안라식
www.smile-eye.co.kr